



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관계장관회의 개최

- 김민석 총리,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의지 강조
- 효과적인 인재양성 투자를 위해 범부처 협력 강화

【관련 국정과제】 55-1. ‘서울대 10개 만들기’로 국가균형성장 추진 등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4.24(금) 08: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‘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관계장관회의’를 열고,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대학 선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범부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
 - * (참석) 교육·재경·과기·행안·산업·국토·중기부, 기획처, 지방위 등 9개 부처
- 정부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토-산업-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‘국토공간 대전환 (지방균형국가) 프로젝트’를 추진하고 있다.
- 김 총리는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 위원장으로 그간 두 차례 회의를 직접 개최하고, 부처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등 세부 추진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.
- 교육부는 지난 4.15(수) 국토공간 대전환 과제 중 ‘지역인재 양성’을 추진 하기 위해 ‘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’을 발표하고,
 - 올해 3개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과 인공지능(AI)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교육·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.
-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, 올해 패키지 지원 대상이 될 3개 거점국립대 선정계획과 부처간 정책 연계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.

- 그간 역대 정부에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다수 시행되었으나, 산업 육성, 일자리 확충, 정주여건 개선 등 범정부적 정책 연계가 미흡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‘지방 살리기’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.
- 이에, 이번 ‘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’ 추진 과정에서는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대학의 교육·연구에 집중 투자하고,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·지원에도 관계부처의 정책·사업이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.
- 최고진 교육부장관은 “대학의 노력만으로 인재가 지방에서 성장하고 정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,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□ 김 총리는 “지방주도 성장의 핵심이 인재이며, 정부는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”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,

- “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연구하고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을 통해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줄 것”을 당부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전예진 (044-200-2321)
	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실	담당자	서기관	김민하 (044-200-2322)
담당 부서 <공동>	교육부	책임자	과 장	안주란 (044-203-6243)
	국립대학지원과	담당자	서기관	신태연 (044-203-6250)